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6-8호

발행일: 2026. 7. 14. (화)

제436회 국회(임시회, 2026. 6. 5. ~ 2026. 7. 4.)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36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6월 5일부터 2026년 7월 4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6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모두 3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6회 국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환경규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바이오산업 육성과 규제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6회 국회의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30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교육위원회(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등 10인
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의원 등 10인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등 14인
4	국방위원회(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 등 10인
6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의원 등 11인
7	행정안전위원회(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 등 15인
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1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1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14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기구 의원 등 12인
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 등 12인
1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 등 12인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등 11인
1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의원 등 11인
1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등 10인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21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1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2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25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의원 등 12인
2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의원 등 13인
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등 10인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등 11인
3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의원 등 10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개요

최근 재생의료, 조직공학,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인체유래 물질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소재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은 인체유래 지방조직을 조직물류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전량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체유래 지방에는 콜라겐,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와 바이오소재로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계에서는 재활용 허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정부는 감염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나, 재생의료와 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안전성을 전제로 한 제한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관련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산업육성 정책과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을 연결하는 유의미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5-4호 국가전략기술 지원·육성 V, 제2024-4호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제2022-10호 폐기물(폐자원) 재활용과 순환경제 이슈 등 참조).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일정한 용도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고, 경미한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체계를 합리화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재활용이	2026-06-18 (원안가결)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026-06-18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6. 경제 · 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국조실)

- 과제목표
- AI 융복합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고 3·3·5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성과 신속 창출
- 주요내용
- (AI, 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 배제*,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규제 설계
 - * 기술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유예
 - 법령 조사 등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추진, 사후 위험관리를 위한 민사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강화 병행
 - (규제샌드박스 성과 제고) 부처별 분절화된 운영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상용화 전 주기 통합 관리
 - 실증특례 종료시 원칙적으로 법령 정비, 상용화 중심 성과관리, 기업의 제심의 요청 과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례 부여*(전략기획형 샌드박스)
 - * (가칭)「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메가특구 신설) 지자체의 규제특례 설계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정책 금융, 인프라 등) 제공을 통해 대규모(초광역 포함) 특화산업 성장 공간 조성
 - (컨트롤타워 강화) 대통령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를 단일화하여 성과 조기 창출, 전문연구기관 및 지자체 역량 확충, 정부·국회간 협력체계 구축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참고 자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명옥 의원안: 인체유래지방의 재활용금지 · 제한대상 제외 2025. 11.
김위상 의원안: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 2025. 1.

기증 인체조직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제15차 K-바이오헬스 포럼 국회의원 정책자료

4대 분야 15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누리집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2. 4. 6.

본 보고서는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폐지방·폐치아 등을 의생명산업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윤리성·안전성 관련 보완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물: 조직물류폐기물 관리책임과 의료기관 안전관리의 입법적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6. 7. 7.

최근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은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이다. 절단된 인체 일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일반폐기물이나 재활용폐기물로 배출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인체 조직물이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유입되었다는 점은 법적 분류체계보다 의료기관 내부의 발생·확인·전용용기 투입·보관·인계 전 단계에서 관리 공백이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물류폐기물의 부적정 관리는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환자안전, 시설·인력 기준과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물류폐기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8-AA-07 2018. 1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다. 첫째,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범주를 확정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체유래물의 형법적 지위와 성격을 논의하여 인체유래물에 대한 관리와 형사규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 은행의 이용에 있어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형사법 규율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인체유래물 규제에 있어 일관적이고 적절한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인체유래물 및 인체유래물 은행의 이용에 있어 주요 선진국가의 입법례와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법현실에 적합한 착안점을 제시하고, 이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인체유래물은 우리의 생명윤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해당하나, 아직까지 이것은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생소한 개념에 그치고 있다. 형법상 인체유래물에 대한 논의도 현재로서는 그 법적 지위 이상의 논의가 도출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형법은 전통적 의미의 신체개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의료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53권 제1집 2024. 10.

의료폐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태반을 제외하고 재활용이 엄격히 금지·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병·의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지방(脂肪)의 경우 줄기세포, 세포 외 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인체유래 지방을 활용한 의료기기 생산기술 등 첨단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엄격한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그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첨단바이오산업의 기술개발·육성’ 간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였다. 정리하면,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 재활용을 금지하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이후에, 의료폐기물 재활용실증사업 검토를 통하여 첨단바이오산업 개발·육성과 의료폐기물 저감의 요구에 따른 현행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상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시키는 의료폐기물 재활용 범위의 개선, 의료폐기물의 안전성 확보와 윤리성 문제 해결, 의료폐기물 관련 법·제도 간의 체계 정합성 등의 문제 해결 등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된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특례 등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후속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의 해당 신기술들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및 윤리성 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에 관한 후속적인 학문연구의 증가와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기대한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